

의안번호	제236호
------	-------

발 의 년 월 일

2023. 11. 20.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

(이정순 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이정순 의원 외 10인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

(이정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36호
------	-------

발의연월일 2023. 11. 20.

발 의 자 이정순, 강선구, 김영진,
김태금, 박중수, 심완예,
이길원, 이정순, 임종용,
장순관, 홍원표

1. 주 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규정은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가족요양비 금액 규정 없이 전액 지급하고 있음
- 반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은 수급자가 가족인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활용지원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월 한도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장기요양 대상자는 국가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책무가 있고 이 두가지 사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한 요인이 있으므로 장애인활동 지원의 가족 돌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동일하게 활동지원급여를 금액없이 전액 지급함이 타당함

2. 제안이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2022년말 현재 전국에는 983천명의 심한 장애인이 있고 그들은 가족의 돌봄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돌봄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167만명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심한 장애인 만이라도 가족 돌봄에 의한 급여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은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리적 부담은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이미 치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요양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노인 장기요양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법률에서 명시한 장애인 가족 부담 완화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를 개선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며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 전액 지급을 요청합니다.

3. 참고사항

가. 건의안 : 붙임

나. 건의안 보낼 곳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장애인연합회, 예산군장애인연합회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 건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 의하면 2022년 말 현재 전국에는 983천명의 심한 장애인이 있고 그들은 가족의 돌봄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해서는 가족이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돌봄에 전념해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장애인 관련 법률에서 명시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167만명의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심한 장애인 만이라도 가족 돌봄에 의한 급여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족은 여러 가지 힘든 경우가 발생합니다. 심리적 부담은 가족의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 부담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이미 직시하고 침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요양비를 전액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우도 노인 장기요양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헤아려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며 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과 실천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에 따른 시
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급여 전액지급을
요청합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십시오.

예산군의의회는 예산군민 모두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265만 장애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가족 활동지원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

2024. 1.

예산군의의회 의원 일동